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7208.95	↓ 코스닥	1056.07
	(-62.71)		(-28.29)
↑ 금리 (미국 3년)	3.760	↓ 환율 (원/달러)	1505.65
	(+0.009)		(-2.15)

metro® 경제



노동장관 직접 중재... 피 말리는 삼성 노사협상

가계빚 2000조 톱밀 기준금리 인하 변수

다시 협상 테이블 앉아

2차 사후조정·추가조정도 결렬 '영업익 13% 요구' 사측서 반대
 李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염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왼쪽)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청와대는 사후조정 불성립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2차 사후조정과 이날 오전 추가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종노위는 노조 측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영훈 장관이 중재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앞선 결렬 경위를 두고 노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전날 밤 종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은 "노조요

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회사 경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 공통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영업익 13%에 OPI 주식보상제도를 추가하고 부문 70%·사업부 30% 배분 구조와 5년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 직원들까지 동일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수근 종노위 위원장은 "일부 내용은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파업 시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긴급조정권에 선을 그었던 김영훈 장관도 이 대통령 SNS 게시물에 "노사 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달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파업 시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선택에 금융안정 변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물가와 환율 부담에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까지 확인되면서,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명분은 한층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외상거래 등 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부채 지표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2조 9000억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도 127조 3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총량이 2000조원까지 불과 6조 9000억원 남은 셈이다.

한은, 1분기 가계신용 잔액 14조 ↑ 예금은행서 감소 전환 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큰폭 상승 "향후 비은행권 크게 늘지 않을 것"

문제는 증가의 질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자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설명회에서 "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1분기 연간 목표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기 전 보수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며 "비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조치 시행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1분기 주택관련대출은 8조 1000억원 늘어 전분기 증가폭을 웃돌았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권사 신용공여액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주택시장 대출 수요와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 셈이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팀장은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 등이 모집인 대출 접수 중단과 집단대출 중단을 발표한 만큼 향후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

"영업이익 배분, 주주가 하는 것... 노조 요구 이해 안돼"

李 대통령, 삼성 노조 겨냥 발언 "노동 3권, 사회적 약자 위한 것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제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체인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노동 3권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노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

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과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절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타당하지 않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

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무신사 광고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롱하는 광고 사실이라면 심각"
 ▲노태약 선거관리위원장 "지방선거 불필요한 오해·의혹 발생하지 않게 최선" /사진 뉴시스

▲김정관 "원유 비축, 8월 이후엔 불투명... 최악의 상황 염두 대응"
 ▲조승래 사무총장 "김관영 복당, 당 대표 바뀌어도 안 돼"

▲국힘 "전재수, 보좌진을 출세 소모품으로... 부산시장 자격 있다"
 ▲"후보자가 이런 망언을?"... 틱톡, 지선 앞두고 SI 허위정보 칼팍